

다주택 양도세 종과유예 연장없다... “무조건 5월 9일 종료”

청와대 국무회의 발언

이 대통령 “주가·집값 같은 선상 아냐”
구윤철 부총리 “3~6개월 잔금 면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가는 띄우면서 집값은 누른다’는 비판에 대해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다주택 양도소득세 종과 유예 종료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 유예에 대해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계약분까지만 적용하되,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 뒤까지 잔금을 치르면 유예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주가는 올리려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는 얘기가 있다”며 “주가와 집값은 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흐름과 관련해 “오늘 다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다”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더 잘 되도록 힘을 합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는 게 우리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주가는 기업 활동에도 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 보는 사람은 없다”며 “반면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주가는 띄우면서 집값을 억누른다’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 제도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주택 매매 활성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해 유예한 뒤 1년 단위로 연장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해당 제도를 4년 넘게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연장 조치를 없애고, 제도의 정상적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보고를 통해 “(유예 조치를)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비정상·불공정 행태를 유발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제는 정상화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번에 종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최근 조정지역 확대 등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강남 3구와 용산 등 지역은 기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오는 5월9일까지 체결한 계약까지만 유예를

인정하고, 3개월 이내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 유예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는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하지만 부동산 거래 관행이나 조정지역 확대 등을 감안해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한 뒤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3개월은 부족할 수 있어 마련된 보완 조치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다주택자 종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등 사후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종과 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제 보완, 편법 증여 등 이상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이 아마 종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종과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특위, 오천피 달성에 K자본시장으로 개편

명칭 변경하고 5대 중시 과제 추진
3차 상법 등 자본시장 선진화 결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만에 증가 기준 5000포인트(p)를 돌파함에 따라, 집권여당인 민주당내에서 활동하던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3일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5대 과제 추진에 결의를 다졌다.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칭 변경 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에선 이제 코스피 5000p를 넘어서 6000, 7000, 8000, 9000, 1만p까지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모른다”며 “그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코스피 5000을 이제 벗어나서 그 이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가야 될 때”라고 말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5대 중

심과제인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현장 정착 지원 ▲주주환원 활동 활성화 ▲중복상장 등 방지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법 도입을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고, 코리아프리미엄을 이야기하는 선진국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제도 개혁이다. 자사주 제도와 관련한 세법과 공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추진하는 것에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자사주(소각) 예외를 이야기하면 한이 없다. 예외의 예외로

(법안을)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결정은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으면 보유, 처분, 시기 조정도 가능하다”며 “주주총회 동의 절차를 가지고 (기업을) 압박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주 설득도 못하는 결정을 왜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오 위원장은 “1·2차 상법 개정 이후 과제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과연 바뀌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에 대한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결정이라면 (이사가) 주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설명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기관 투자자, 장기 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스투어십 코드 의 개선, 기관 투자자의 스투어십 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시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중복상장 관련 제도 개선, 공정한 합병 기준에 관한 문제, 코너스톤 제도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여야가 법안을 발의해냈는데, 정무위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걸음도 가지 못했다”며 “여야 간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않는 것들부터 풀어야

아하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주가 누르기 현상에 관한 제도적 비판이 있고 그와 관련한 대안들이 제안되고 있다”며 “인수합병(M&A) 절차를 바꾸면서 공시 제도를 통해 주가 누르기 현상을 개선할 수 있지 않냐는 제안도 있고 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주가 누르기 방지를 풀 수 있는 것이냐는 제안도 있다”며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한병도, 野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세 재인상시 후속적 부담 떠안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에게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처리와 원포인트 개헌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



설에서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

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 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전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

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민생’이라며 지어진 개혁 입법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쏟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투어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도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기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국민 다수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이라며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와 생산성이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만 몰리는 구조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